

주간 이슈 리포트

68 호

2005년 1월 셋째주(1/17 ~ 22)

◎ 주요내용

- | | |
|------------|---------------------------|
| - 세상돋보기: | 부실도시락 파문 비난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
| - 노동자 세상: | 노통장보다 안목없는 노통령 |
| - 통신정책: | 폴리지 않는 IP-TV |
| - 정자동 6층에서 | 부산인구보다 많은 빈곤층 |
| - 만화방 | 시사 만화 |



‘부실도시락 파문 비난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불량도시락 파문, 신문 방송에 도시락 사진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서귀포에서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드러난 도시락에는 빵 1개, 단무지 3조각, 게맛살 4조각, 삶은 메추리알 5개, 튀김 2조각이 들어있다. 군산에서 공개된 도시락에는 삶은 메추리알 4개, 참치 김치볶음, 단무지 채와 건빵 5개가 들어있다. 강추위 속에 그 도시락 사진들을 보니 위장이 얼어붙는 기분이다.

“제 자식이라면 이런 음식을 주겠느냐”는 비난이 빗발쳤지만 도시락 업자들을 악덕업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 다른 지역 도시락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급식소를 갖춘 사회복지시설이나 배달을 맡아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어려울 것이다. 2천5백원의 예산으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골목골목 배달까지 해줘야 한다면 메뉴 선택부터 힘들 것이다.

지금은 비난하거나 문책할 때가 아니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때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지자체들이 도시락 배달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직 첫걸음이니 만큼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가면 된다.

“도시락 잘 먹었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건강하세요”라는 감사인사를 빈 도시락에 넣어보내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사회의 희망이 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새로운 방법과 대안찾기를 시작해야 한다.

경향신문에서 옮겨 적는다.

최근 부실도시락 지급 문제가 전국적으로 드러났다.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대책들도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이번 부실도시락 지급 사건은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시각과 정책 미숙을 말해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1989년 교육부가 중식지원 사업을 전개하면서 시작됐다. 2000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석식을 제공하는 결식지원을 추가로 실시했다. 그러다가 지

난해부터는 중식지원과 결식지원을 통합하여 교육부는 학기 중에만 실시하고 토·일요일 및 방학중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맡아서 하는 역할분담을 하게 됐다. 그리고 지난해 말 정부 업무의 지방이양 결정에 따라 겨울방학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식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또 바뀌게 된 것이다. 예산문제 등 현실을 감안하여 도시락 급식단가는 2,500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겨울방학에 맞춰 각 지자체가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예산계획을 잇따라 언론에 발표한 지 불과 며칠 안 돼 부실도시락의 실태가 드러나게 됐다. 이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당초 사업 진행의 본질적 의미와 구체적 계획에 따른 예산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인당 얼마’라는 단순 수치대입에 따른 비용 산출과 ‘도시락 배달과 업체선정’에 대한 편의적 탁상행정, ‘지원해준다’는 것에 급급한 전시행정이 어우러져 빚어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업체를 정하여 배달비와 용기 비용 등을 감안하다보니 형편 없는 도시락을 제공하게 되고,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단가를 높이면 된다는 식의 발상이 나오게 된다.

-지원대상부터 정확히 파악-

이미 학교 급식에서 영리 위주의 위탁급식에 따른 부작용이 여러 차례 지적되면서 사회문제화했는데도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를 위탁업체에 맡기고 돈을 지불하는 정도로 해결하려는 업무 편의적 발상이 여전한 것이다. 급식 위탁업체들은 본질적으로 최대한 비용을 아끼고 이윤은 많이 남겨야 한다는 장삿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양질의 식단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식단을 검열하고 지원내역을 철저히 감시한다 해도 관리감독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식지원은 말 그대로 국가의 빈민구제와 구호 차원에서 이뤄지는 복지여야 한다. 복지는 사회비용으로 소외된 아이들에게도 평등한 성장을 하도록 돕기 위해 실천하는 중요한 일이다. IMF이후 빈곤과 소외, 가정해체 등 사회 저변의 문제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이에 따른 지원 대상과 예산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결식아동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를 제공하여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대접받아 건강하게 성장하여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하는 일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복지와 교육의 문제다. 밥은 따뜻함과 생명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사랑, 나눔과 배려에 감사함을 배우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결식지원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상품권 지급 등 다른 방안의 경우에도 보완이 필요하며 전체적으로 추가예산 확보와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으로 개선 방향이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지원의 원칙과 본질을 분명하게 짚어내지 않는다면 기존의 관행을 벗지 못한 채 무의미한 예산낭비와 불신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관행 개선없인 불신만 가중-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정확한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교육복지 우선투자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처럼 지역사회와 학교교육 간의 연계프로그램을 시스템화하여 공부방, 방과후 학교활동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궁극적으로는 급식을 포함하여 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무조건 최상이어야 한다. 아이들이 건강하면 의료비는 물론이고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책임의 보육과 교육을 전제로, 지역·학교 간 원활한 정보와 사업 공유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결식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주변의 아이들을 제대로 돌아보자. 최소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아이들이 장롱 속에서 굶어죽는 일만큼은 없도록 하자.

누구를 위한 경제 살리기인가?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은 한해의 정부 정책을 개괄적으로 공개한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노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이 책임 떠넘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몇가지 대안조차 진단과 처방을 잘못내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상대 장상환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연두 기자회견 내용의 대부분을 경제문제에 집중하고 ‘동반성장, 선진한국’을 주장했다. 이른바 ‘경제 살리기’에 모든 것을 내건 셈이다.

노대통령이 현재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산업간 기업간 노동자간 양극화로 진단한 것은 타당하다. 한국 경제의 자본주의적 모순 심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빈번한 자살과 출산율 급감 등 사회의 재생산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그 동안 경제위기를 부인하던 정부도 이제 이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양극화에 대해 노대통령이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분배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조세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은 없다. 양극화라고 하지만 실상은 국민 절반이상의 생활이 전보다 더 나빠졌다. 분배를 개선하려면 엄청난 이윤을 올리는 대기업, 외국자본,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층의 부담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대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를 촉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각종 조세 감면 기업도시법 등 자본가들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난다. 성장과 분배를 함께 추구한다지만 실제로는 성장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것이고 이 점에서 재계가 요구해온 한나라당의 경제정책 기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한나라당은 ‘노무현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읽은 대로 실행하라’고 논평하기까지 했다.

둘째, 기업간 양극화의 책임을 중소기업 측에 떠넘기고 있다. 기업간 양극화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이다. 대기업이 납품 단가 인하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을 압박하여 엄청난 이윤을 거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노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고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구조조정(선별 육성)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선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문어발 사업 확장으로 중소기업 영역에까지 진출하려는 재벌대기업의 방만한 행태를 출자총액제한제 강화, 집단소송제 강화 등을 통해 규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자간 양극화의 책임도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노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술능력 부족과 대기업 노동자의 과욕 탓으로 돌리며 처방책으로서 정부의 ‘이동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 방안과 함께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정규직, 특히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협력”을 요구한다. “소수에 대한 두터운 보호보다는 다소 수준이 낮더라도 다수가 폭넓게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정규직과의 격차와 차별이 확대된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기주의가 아니고 외국자본과 재벌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 국내외 대자본가 계급의 힘이 너무 세고 노동자들의 힘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노대통령은 노동자간의 이해 대립을 앞세운다.

노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민주노총의 대기업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자들 사이의 하향경쟁을 부추기는 개악이라고 극력 반대해온 법안이다. 노대통령이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근로자파견법 개악안을 완전 철회하고 비정규직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간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교섭을 넘어서 초기업적 교섭, 즉 산업별 교섭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교섭결과인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일반 구속력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유럽 각국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의 보호를 법률이 아닌 협약으로 보호할 경우 대부분이 일반 구속력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비율은 10%에 불과한데 단체협약 적용률은 90%에 이른다.

또한 기업경영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이 단기적 주주이익 위주로

만 나가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에게도 금융이 공급되도록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개방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 불안정과 분배 악화를 심화시킬 따름이다. 이미 외국자본의 한국경제 지배에 따르는 부작용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일은행 해외매각은 이현재 부총리도 인정했듯이 선진 경영기법 도입에 별로 기여하지도 못했다. 대신 5천만원 이상 고액예금이 70%를 차지하는 제일은행 지원에 국민세금 5조원을 날리고 해외투기자본에 1조2천억원의 차익을 선사하면서 세금은 한 푼도 거두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IMF 외환위기 이후 7년 동안 외국자본의 진출 확대로 배당금과 이자로만 64조원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노대통령이 강조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촉진제로서 한일, 한미 FTA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을 개방할 경우 금융의 양극화, 의료의 시장화, 교육의 사유화를 부추길 것이고 이것은 다시 분배를 악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을 것이다.

다섯째, 노대통령이 고등교육을 산업으로, 즉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물론 대학도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사립대학들도 대부분 기부금의 비중이 3분의 1 이상이다. 대학을 경영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기간에 수준 높은 대학으로 성장한 포항공대의 경우에도 포항제철이 대규모 지원을 하여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장학금과 급여, 연구비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학력별, 정규·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여 대학지원율을 낮춰서 대학생수를 감소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대학에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큰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의 과제인 자본주의적 모순과 민중생활의 악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합당한 처방을 실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패세력이 있고 기득권세력의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여기에 대항하여 다수 국민의 뜻을 모아 부패세력을 처벌하고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기득권세력과 야합하는 순간 권력은 무력해지고 결국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국정 지지율 하락에서 나타나듯이 노무현대통령은 그 초입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대통령이 문제를 직시하고 노선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계와 한나라당에서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내용을 적극 환영하고 나온 것은 노대통령의 지향이 반민중적이고 보수적, 신자유주의적임을 잘 말해준다.



플리지 않는 IP-TV

인터넷망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방송·주문형비디오(VoD) 등을 이용할 수 있는 IP TV 서비스를 둘러싸고 방송·통신 업계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IP TV 서비스를 허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IP-TV 논쟁의 당사자인 KT와 하나로텔레콤은 'IP-TV는 방송'이라는 케이블방송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법적인 유권해석 결과 "IP-TV는 방송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 서비스 영역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통신 사업자의 경우, KT는 'IP 미디어' 서비스를 올 하반기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하나로텔레콤 또한 시범서비스를 거쳐 올 하반기엔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선다는 방침에 있다.

방송·주문형비디오(VoD) 등을 이용할 수 있는 IP TV 서비스를 둘러싸고 방송·통신 업계간의 서로 다른 입장을 디지털타임스와 서울경제를 통해 분석해 보자.

최근 IP TV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방송계 일각에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융합 서비스들이 잇따라 출연하면서 기존의 법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적인 부분만을 놓고 볼 때 IP-TV를 정의하는 법률이나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 통신사업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방송법 적용이냐,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이냐의 부분은 법 해석자의 입장에 따라 적용과 해석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케이블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IP-TV가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에 해당된다는 법적 규정은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IP-TV는 현행 방송법상 방송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

스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면서 "따라서 법적인 해석 기관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며, 'IP-TV는 방송'이라는 케이블협회의 해석 또한 케이블 입장에서 보는 것일 뿐 큰 의미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관계자는 특히 "전기통신법상 '설비를 이용해 정보를 전송'하는 규정만을 놓고 볼 때 정보가 단지 데이터와 음성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영상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정보에 포함되는 것으로 IP-TV에 대한 법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관계자 또한 "방송이나 통신은 현재 전형적인 융합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굳이 현행법상 법규를 적용해 해석한다면 통신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케이블협회의 주장처럼 IP-TV를 방송법의 규제하에 둔다면 인터넷 서비스는 모두 방송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굳이 이슈를 삼는다면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IP-TV의 문제는 세계적인 융합서비스와 관련해 해결방안은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분리'로 가닥 잡고 있다"면서 "차제에 MSO를 옥죄고 있는 다양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통신사업자와 규모의 경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해결방안으로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융합법을 제정하는 것 밖에 없으며, 단기적으로는 집단 이기주의를 내세워 산업발전을 가로막기 보다는 융통성있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3일 통신사업자의 IP TV 논쟁에 대한 케이블TV 입장을 공식 발표한 자리에서 "현재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시점에서 KT,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IP TV 서비스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한국케이블TV방송국협의회 한 관계자는 "케이블 업계에서 IP-TV에 대해 무조건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시범서비스 정도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여 관심을 끌었다.

한편, 방송위원회 한 관계자는 케이블업체들이 주장하는 규제완화와 관련, "권역별 20% 제한 한도를 IP-TV 논쟁과 결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권역별 규제완화의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95년 케이블TV 출범 이후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논쟁, 최근의 방송·통신 융합 등 방송시장에서 업계간의 지속적인 충돌이 궁극적으로는 현재 규제 일색의 방송법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SO의 경우,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가 77개 권역 중 20%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고 특정 사업자의 매출이 전체 시장 중 33%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인구보다 많은 빈곤층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28일 내놓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이 연간 4천만원을 넘은 사람이 1만9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보에서 발표한 급여생활자 평균연봉이 3천1백만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이자와 배당만으로 1년 동안 일한 월급보다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2만여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2002년의 경우 4천만원을 이상의 금융 소득자가 1만5천여명에 달한 것에 비춰봐도 4천명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빈곤층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산층이라 할지라도 언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문화는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를 통해 빈곤의 실태를 알아본다.

“나는 아버지가 안 계신 소녀가장이다. 고등학교 입학금조차 없는 가난한 집의 둘째딸. 이런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엄마, 죽는 생각 자체가 불효라는 것 알아. 하지만 내가 없어지는 것이 돈이 덜 나가 다행일지도 몰라.”

작년 3월 빈곤으로 죽음을 택한 한 소녀가장의 유언이다. 작년에는 유난히 절망적인 빈곤으로 자살을 택한 사람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자살의 전염성이 강하다는 말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거나 보릿고개가 있던 옛날을 떠올리며 자살을 택한 사람들의 도덕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줄줄이 이어지는 생계형자살 앞에 자살의 전염성이나 도덕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 심각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92만 8천원 이하의 소득가구가 전체 가구의 10.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열 집 중 한 집은 절대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미만)은 전체 가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절대적 빈곤층에 포함된다. 이는 절대빈곤가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92만 8천원이 2004년 평균 가구의 소비지출인 194만 3천원의 48%에 그치고 있어 차상위계층 역시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의 수는 4백10만명에 이르며 이는 부산광역시 주민보다도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빈곤탈출 어려운 이유

이들이 절망적인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서 돈을 받거나 혹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썩 괜찮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빈곤탈출은 어렵기만 하다.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절대빈곤층의 30%에게만 생계급여를 제공한다. 원인은 친인척으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고 간주하는 기초법의 부양의무 기준에 있다. 그러나 2000-2002년까지 개인사업자금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이 평균 21%성장 하는 등 가구당 금융부채가 증가했으며, 한국은행은 가구당 3천만원의 빚이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전반적인 생활수준 하락과 가계부채의 증대 속에서 다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절대빈곤층의 기초소득은 국가로부터 그리고 친인척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이제 절대빈곤층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선택은 노동시장에서 썩 괜찮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빈곤층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51.3%가 60세 이상의 가구주여서 기술 습득을 통한 취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듯 절대빈곤층 중 미취업가구는 64.1%에 달한다. 게다가 절대빈곤층 중 노동능력이 있어 일을 한다손 쳐도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있다. 1996년 절대빈곤층 중 취업한 사람들의 37.3%가 상용직이었으나 2000년에는 그 비율이 9.2%로 감소했다. 또한 임시·일용직비율은 1996년 38%였던 것이 2000년 52%로 증대해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결국, 노동시장을 통한 빈곤탈출의 희망은 또 다른 절망이 되고 있다.

저임·고용불안 빈곤향한 지름길

게다가 이런 절대적 빈곤층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1996년 절대빈곤가구와 차상위가구는 전체 가구의 6%이었으나 2000년에는 14.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빈곤가구의 비율이 2000년부터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03년을 기점으로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이런 빈곤가구의 증대경향은, 비록 현재는 절대적 빈곤층이 아니지만 언제든지 절대적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대량의 잠재적 빈곤층의 존재를 반영하고 있다.

잠재적 빈곤층은 노인인구가 50%가 넘는 현재의 절대적 빈곤층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잠재적 빈곤층 대부분은 노동능력이 있고, 일을 하는 특징이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이 이들의 빈곤화경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2004년 경제활동부가조사에 의하면 임금노동자 중 55%가 비정규노동자이며,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인 110만원이다. 이는 2004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05만5천원과 4만5천원의 차이만 있어 최저생계수준의 월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미만이 비정규노동자 만이 4대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질병·산재 혹은 아이들의 교육비는 이들을 언제든지 절대빈

곤충으로 추락시킨다.

그러나 빈곤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아니라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늪과 같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절대적 빈곤층의 소득보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노동시장 유연화 속에서 잠재적 빈곤층은 증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들이 희망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누구도 빈곤의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만

화

방

